

북한, 불법사이트 韓에 팔아 외화벌이 나서

‘김정은 비자금 관리’ 노동당 39호실 산하 경흥 적발 국내 범죄조직에 北 개입 첫 확인...경찰과 실체 규명

국가정보원이 수조원대 국내 불법 사이버 도박 범죄에 개입한 북한 IT 조직원들의 신상을 처음 공개했다. 한국인 범죄 조직에 대해서는 경찰과 실체를 규명 중이다.

국정원은 북한 노동당 39호실 산하의 ‘경흥정보기술교류사(경흥)’ 조직원들의 신상을 비롯해 개발·판매·운영 실태 전반을 파악하고 관련 사진과 동영상 등을 입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개인 비자금을 조달하는 노동당 39호실 산하의 조직이다.

대남공작을 담당하는 정찰총국 소속으로 39호실에 파견돼 경흥을 총괄 운영하는 김광명 단장 아래 정류성과 전권욱 등 15명의 조직원이 분업화된 체계로 활동했다. 대북 사업가가 소유·운영하는 중국 단둥 평청 소재 ‘금봉항 복식유한공사’라는 의류 공장의 기숙사를 근거지로 삼았다.

경흥은 중국인 개발자로 위장한 뒤 IT업체 종사자의 경력증명서를 위조·도용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 제작 일감을 수주해 한국인 범죄 조직에 판매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제작에 1건당 5000달러, 유지·보수 명목으로 매월 3000달러를 쟁겼다. 사이트 운

영자들의 취향에 맞는 사이트 디자인을 만들어 구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용자가 늘어나면 매월 2000~5000달러를 추가로 받기도 했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경흥은 대북 제재를 피해 중국인 명의 은행 계좌나 한국인 범죄 조직의 차명 계좌, 해외 송금이 용이한 페이팔(PayPal) 결제 서비스 등을 통해 개발 대금을 받았고, 이를 중국 내 은행에서 현금화한 후 매월 1인당 평균 500달러씩 북한으로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에는 북한인 활용 전자상거래 계정까지 제재 대상이 되자 중국인 브로커에게 매월 20달러를 주겠다고 결제 서비스의 타인 계정 대어를 문의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흥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제작해준 후 유지·보수 하면서 관리자 권한으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배팅을 자동으로 해주는 ‘오토 프로그램’에 악성코드를 심어 회원정보도 탈취했다. 이런 수법으로 성명, 연락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탈취 건수는 1100여 건에 이르며, 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판매를 시도하기도 했다.

또 이번에 적발된 국내 범죄 조직이 불법 도박 사이트용 서버를 구매해 북한 IT조직에 제공했고, 이



들이 해당 서버를 국내 기업의 기밀을 해킹하는 데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정원은 경흥과 유사한 외화벌이 조직원이 수천 명에 달하며 대부분 중국에서 불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은 경찰과 함께 북한 IT조직에 불법 사이트 제작을 의뢰하고 이를 판매한 국내 범죄 조직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고 있다.

국정원은 “한국인 범죄 조직들은 북한이 요구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 제작 비용이 30~50% 저렴하고 한국에서 소통도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북한인임을 알면서도 거래를 계속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국내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도박 범죄의 배후에 북한이 깊숙이 개입해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최초로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면 기자



해양경찰교육원, 직무체험 과정 운영

해양경찰교육원은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전국 5개 대학의 해양경찰학과 재학생 15명을 대상으로 ‘해양경찰 직무체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슬비 기자



구례소방, 전통시장 안전 네비 소화기 위치를 한눈에!

구례소방서는 겨울철 화재예방대책으로 관내 전통시장에 설치돼 있는 소화기의 위치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LED등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구례=박진호 기자



광양소방, 겨울철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주의 당부

광양소방서는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과 같은 화기 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장 화재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13일 밝혔다. 광양=기동취재본부



진도소방, 화목보일러 설치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진도소방서 119생활안전순찰대는 지난 13일 겨울철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관내 화목보일러 설치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보급했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 기자



담양소방,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교육·훈련 및 평가

담양소방서는 이번 겨울철 관계인 중심의 초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화재대응 교육·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 기자



완도해경, 대형 기름저장시설 현장 점검에 나서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13일 관내 대형 기름저장시설인 완도금일수협 신지금융소를 방문, 시설물 운영 및 관리실태, 방재대응체계 등에 대해 점검했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성범죄·기밀유출에도 근무·승진까지...공공기관 임용·징계 ‘허술’

감사원, 279곳 감사 결과 공개...기재부에 제도개선 통보

공공기관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 징계 3개월 징계만 내리고 계속 근무하도록 하거나 기밀 유출로 징계유예를 받은 직원을 승진시키는 등 임용과 징계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임용·징계제도 운영실태 분석’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1월 기준 직원 수 100명을 초과한 공공기관 279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들 기관이 지난 2018년 이후 경찰청 등 수사 기관으로부터 소속 임직원에 대한 수사 개시 및 결과 등 수사 사실을 총 1528건 통보받았다. 연도 별로는 2018년 249건, 2019년 256건, 2020년 270건, 2021년 317건, 2022년 314건, 2023년 상반기(1~6월) 12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동북아 역사재단 등 6곳만이 직원 임용 결정사유를 법령에 규정하고 있었다. 국가공무원과 같이 채용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나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등을 통해 임용될 사람의 결정사유 해당 여부를 조회·검증해 임용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철도공사 등 나머지 273곳(97.8%)은 법령이 아닌 기관 내부 규정으로 직원 결정사유

를 정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채용 과정에서 임용 예정자로부터 자기진단 체크리스트 등만 제출받아 그 진위를 확인하지 못한 채 그대로 임용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 등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데도 임용예정자 등록기준지 지자체를 통해 규정에 어긋나게 결정사유를 확인하는 등 혼선을 초래했다.

또 한국장학재단을 제외한 278곳 중 141곳이 당연퇴직 대상을 협소하게 규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징계유예를 선고받거나 횡령·배임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등 3가지 결정사유 전부를 당연퇴직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한다.

하지만 한국철도공사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징계유예를 선고받은 직원 8명 중 4명을 징계, 4명을 불문경고 조치만 각각 취하고 당연퇴직을 시키지 않았다.

한전KPS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소속 직원에 대해 징계 3개월의 징계 처분만 내렸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4개 연구기관은 단체협약을 체결해 내부 규정과 달리 당연퇴직 범

위를 실행 복역으로 축소 운영했고 그 결과 2021년 9월 기밀유출로 징역 3년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직원이 징계시효 완성으로 불문경고 조치만 받은 채 계속 근무하며 승진까지 했다.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수사결과를 통보 받지 못해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한국철도공사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소속 직원의 휴대폰 투약·매매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다가 지난해 3월 근무지에서 체포된 후에야 당연퇴직 조치를 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소속 직원이 선고 전 날부터 연차를 내 파악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복역 사실을 파악해 해임 처분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직원의 2022년 7월 뽕소니 사건에 대해 소관 경찰서로부터 통보 받고서도 문서 접수 전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감사 오다가 감사 기간 중 징계 처분했다.

아울러 한국석유공사 등 193곳(69.2%)이 음주 운전 자체 확인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임직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인사에 반영하는 등 사후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에 이를 통보하고 제도 개선과 공공기관 지도·감독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명령했다.

유우나 기자



‘21년 전 그날을 기억합니다’

정을 바라보고 있다.

2·18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21주기를 나흘 앞둔 14일 대구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에 마련된 기억공간을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 영

女취객 부축해 집까지 따라 들어가 성폭행 시도 50대 구속

만취자를 부축하고 있는 여성에게 도와준다고 접근해 집까지 따라 들어가 뒤 성폭행하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날(13일)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40분경 서울 성동구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여성 B씨가 만취자를 부축하고 있는 것을 보고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집까지 따라간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와 함께 만취자의 집 안까지 들어갔고, 이후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자 현장에서 도망갔고, 약 5분 후 경찰에 “모르는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자진 신고했다고 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을 수색한 끝에 서울 동대문구의 한 거리에서 A씨를 검거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우나 기자